

2차 北美회담 조율… 비핵화·종전선언 ‘빅딜’도 촉각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7일 방북

당일치기 일정으로 평양 방문
사흘 동안 韓·北·中·日 순방
비핵화 조치 절차 급류 관측
青 “북미 실질적 대화 오가길”



마이크 퐁페이오 국무장관. /뉴스



퐁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퐁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종전선언, 비핵화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북미 양자 간 대화가 정상궤도로 올라갔고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퐁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소식을 알렸다.

퐁페이오 장관이 7일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한 뒤 당일 바로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퐁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 하루 전인 6일엔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퐁페이오 장관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8일엔 중국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퐁페이오 장관의 발걸음이 6일 일본 도쿄→7일 평양과 서울→8일 중국 베이징 등 사흘 만에 4개 국을 오가며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번째 방북을 하게 되는 퐁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정

상회담 장소와 일정, 그리고 비핵화 절차를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문 대통령과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당시 “2차 미북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갖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와는 다른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퐁페이오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빅딜’ 담판을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 트럼

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는 퐁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 등을 발표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한층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회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해서 북한과 대화하

고 있고 진전하고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회담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시점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퐁페이오 장관은 임의로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시한을 정해 서두르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안다. 나는 퐁페이오 장관이 대화를 계속하기 고대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사랑’ 발언에 대해선 “지도자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은 일”이라며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퐁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북미간 실질적인 대화들이 오가기 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퐁페이오 장관의 방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여부”라면서 “방북 기간 중에 날짜와 장소에 대한 윤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과 미국에 공이 넘어갔으니 문 대통령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수협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 1100배 증가”

〈물량〉

손금주 의원 금액은 6070배 늘어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으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kℓ가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는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 증가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 원에서 2890만원으로 289배나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과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남북 지뢰제거 시작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작되는 화살마리고지 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100여 명, 국정감사 모니터링

소상공인연합회, 모니터단 출범

소상공인 100여 명이 올해 국정감사 모니터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에 100여 명의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시켜 소상공인 사안을 비롯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지난 10여년 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매년 수백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올해 초 ‘대한민국 법률봉사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로 소상공인 관련사안들이 국회에서 많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들은 문구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3년간 가정폭력사범 16만명… 구속은 단 1%

이재정 더민주 의원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

재범률 4년 만에 2배 ‘껑충’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초래”

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이 약 16만여 명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구속은 단 1632명에 그쳤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